



01 기조발제

02 정광열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02 좌담

좌장 :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Section 1. 문화분권 문화자치Ⅰ ‘문화도시’

- 15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 17 유영심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부센터장
- 20 제현수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

Section 2. 문화분권 문화자치Ⅱ ‘문화재단’

- 24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0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 33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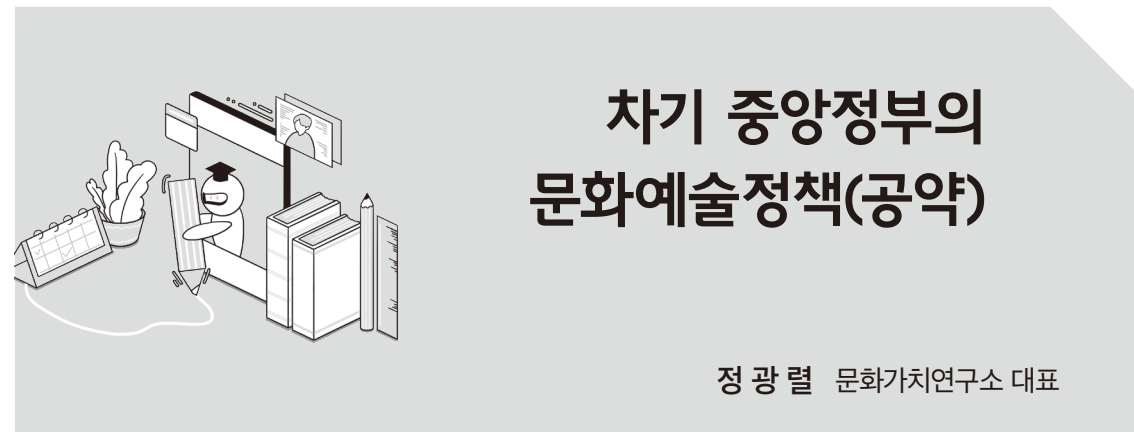
Section 3. 예술진흥 ‘예술인복지와 예술지원’

- 36 정 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41 이홍섭 전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 45 원영오 극단 노들 대표
- 48 문유미 조각가(청년예술인)

03 강원도 문화예술계의 목소리

- 52 강원도예총
- 55 강원민예총

기/조/발/제



1.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와 문화예술정책 기조의 관계

차기 정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슬로건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공정은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시대정신이다. 공정에는 소외된 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위한 복지도 포함한다. 상식은 소수의 엘리트나 실질과 괴리된 과도한 이념, 왜곡된 레토릭 중심에서 다수와 수요자를 위한 실제 정책, 공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지향한다. 미래를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구조와 혁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은 근본적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의 혁신이다. 전략적인 산업, 과학기술의 육성 이외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이를 통한 일하는 방식, 정보의 집적·공유·유통·활용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사회의 잠재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에서 자치 분권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 혁신과 잠재력 성장을 지향한다. 전반적인 추진방식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협치에 초점을 둔다. 일자리 및 부동산, 경제 등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인 코로나 19의 위기극복도 핵심적인 정책이다. 또한 주권의 확보, 국민과 국가의 안전도 핵심적인 기조이다.

문화정책도 이러한 전반적 정책 기조와 연계되어 있다. 당선인의 문화공약은 핵심사항에 대해 모두 다루고 있지만, 공동정부를 구성하게 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문화예술 공약은 상대적으로 현안 사항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문화공약 중 당선인의 문화공약과 상반된 공약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선인의 공약 중심으로 다루면서, 일부 안철

수 인수위원장의 정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차기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공약은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5, 문화콘텐츠산업 2, 문화유산 1, 체육 2, 관광 1개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겠습니다
- ②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 ③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④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⑤ 장애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¹⁾
- ⑥ 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⑦ 게임산업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⑧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⑨ 자유롭게 스포츠 향유할 국민스포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⑩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 ⑪ 위기의 관광업계에 관광회복 및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공약, 쇼츠 공약 및 전체 공약에 담기 어려운 세부 공약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본 포럼 주제와 직접 관련된 앞의 3가지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2. 차기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기본 방향

1) 4차 산업혁명 변화 대응

문화정책을 창의·융합 중심으로 구조를 혁신하여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실기·교양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창의·융합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연스럽게 실기를 익히고 문화시장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ICT 문화공간 조성,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 및 관광 체험·안내, ICT 기술을 융합한 미래지향적 문화유산 정책, AR·VR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관광산업 활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1)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이용환경 확대”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공약이 있다.

2)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구조 혁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예술지원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혁신을 지향한다. 예술활동의 주기와 공공지원 위주의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가 작품활동 자체에 개입하기 쉬운 프로젝트 지원을 다년간 지원 위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원을 확대하되 예술활동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고,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문화 규제혁신과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융합을 통하여 문화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3) 문화기본권 보장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

계층간, 지역간 차별 없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문예진흥기금 지역배분 확대,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개편 등 지역중심 문화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혁신하고자 한다. 지역을 문화생산지로 조성하고, 문화도시를 확대하되 추진방향을 지역주민·문화예술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념 지향의 담론이 아닌 지역주민과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4) 민간시장의 자율성 존중 및 정부의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문화인프라 조성, 공정성 제고 및 규제 혁신에 집중하여 민간의 문화활동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예술인 안전망은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연료 체불 예술인 보호 등 민간시장을 존중하면서도 사각지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문화바우처는 지원금액의 확대를 통하여 문화경험과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지향한다.

5) K-컬처를 글로벌 문화의 미래로 발전

한류를 국가 브랜드 제고, K-콘텐츠의 외국 진출 차원을 넘어 한류를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확산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으로 접근한다. 한류의 세계화에서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6)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피해 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당선인의 공약에는 관광은 직접적으로 규정되고, 문화예술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에는 숙박, 여행, 공연·전시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손실보상이 제시되어 있다.

3.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1) 배경

문화는 공유와 학습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한데 문화가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코로나 블루, 문화시설 폐쇄·프로그램 축소로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념·성별·세대간 사회적 갈등과 신뢰 부족, 관용과 포용성 부족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성 장점 및 활력이 저하되어 있다. 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 35위, 갈등지수 29위로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2021 세계경제포럼).²⁾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삶의 질 지표에서도 여가관련 6개 지표 중 여가시간만이 2019 대비 개선되고, 나머지 문화여가 지출률, 여가시간 충분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1인당 여행일수, 여가생활 만족도 등 5개 지표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국민의 삶의 질).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저소득 가구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 크게 감소하여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가구소득(600만원 이상)과 최저 가구소득(100만원 미만)의 문화예술관람을 격차는 40.8%(2018)→50.6%(2020)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예술활동 조사).

2)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문화시장 확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도 비용이 높은 문화예술관람이나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기초생활수

2) 유엔 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최근 발표된 「2022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146개국 중 59위였다.

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문화예술 관람, 스포츠관람, 여행)의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자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지원금액이 10만원으로 사용 용도가 책자구입과 영화관람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문화활동 참여 및 삶의 질 제고 효과 미흡한데, 이를 취약계층과 문화시장에 모두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고령층 대상의 문화바우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도서구입,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로 현행 100만원에서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비 및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한다.

3) 수요자 중심 주체적 생활문화 활동체계 및 예술-기술 융합체계 확대

실기와 교양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화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유·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경험 확대, 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주체적 생활문화, 적극적 예술소비자 및 자발적 예술실기를 익히는 선순환구조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태블릿 PC의 앱으로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하면 교강사가 이를 다양한 음악과 악기로 변주하여 창의성과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급자 위주의 문화예술관람을 같은 지표와 정책 목표보다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역량과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둔 수요자 중심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정책전환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력양성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도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연계하여 문화시설, 콘텐츠, 전문인력/단체, 생활문화클럽 등 문화활동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문화통합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의 문화활동·선호를 진단하여 맞춤형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공간의 ICT 공간 조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을 실현하여 문화시장을 확대하고,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기존처럼 사후 1~2년 후에 회고적으로 산출되는 통계와 실태가 아닌 현장에 대한 실시간 파악과 분석을 통하여 선도적인 정책, 과학적인 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소외가 우려되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4.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1) 배경

정부는 지역문화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지역문화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과 같은 영역으로 간주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전통문화, 특히 생활문화에 국한되어 있다. 문화자치와 분권, 지역문화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비전 제시와 지원의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통제,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화수요에 대한 시도별 격차는 거의 없지만, 도시규모별 격차, 문화생산과 공급의 수도권 집중으로 문화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은 약 2/3, 특히 문화콘텐츠는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여 지역은 서울·수도권에서 생산하는 문화의 소비자가 되어 지역문화생태계 및 지역의 문화가치 재창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 비율은 서울 38.0%, 수도권 65.0%, 공연 및 시각예술 활동 건수는 서울 31.4%, 수도권 48.8%, 공연예술횟수 52.8%, 수도권 66.2%, 등록공연장은 서울 34.4%, 수도권 53.0%,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서울 64.8%, 수도권 87.5%, 영화산업 기획제작업 매출액은 서울 84.3%, 수도권 97.7%에 달한다.³⁾

2) 지역 중심 문화자치 분권 체계 구축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이 균등하게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자치로 실현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고 문화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칸막이가 심한 지역문화진흥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고,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정책 및 거버넌스를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문화정책의 수립 및 효과가 지역에 균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향식 지역문화계획이 아닌 상향식 지역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분권 자치를

3)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0 문예연감(2019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2019.12.31.기준-공연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0 문예연감 2019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등록)자료. 2021.12.30기준(예술인)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의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조정하고자 한다.

3) 지역의 문화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 생산지 발전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을 문화소비지가 아닌 문화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지역간, 시설간 네트워크·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 모든 지자체에 박물관·미술관·복합문화센터가 균형적으로 설립되도록 지원하고,⁵⁾ 지역 거점 문화예술단체의 집중 지원으로 지역을 문화예술 생산지로 발전시키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지역문화 4.0 스타트업 양성, 지역문화크리에이터, 지역문화특구 및 엔터프라이즈 규제 프리존 도입 등으로 4차 산업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를 양성하고자 한다. AI, 메타버스와 지역중점 콘텐츠를 연계·활용한 지역문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 기반 지역 교육기관-지자체-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교육·연구·진흥 주도기관을 지정·지원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화도시 정책은 소수 활동가, 추상적 이념 중심이 아닌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경쟁력·특성과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도시 추진체계를 인증제, 지역주민 및 예술인, 문화예술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문화자치의 가치에 따른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 주민, 지역의 문화발전,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다.

5.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1) 배경

예술지원 및 예술인 안전망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소득예술인·청년예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 논란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

4) NEA는 지원예산의 40%를 우선 각 주에 총액으로 배분한다.

5)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가칭)문화행복지원센터를 통한 문화기본권 취약계층·지역집중지원, 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작은 영화관, 미디어센터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시장의 권력 관계로 인하여 이에 상응한 정당한 수익과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술계약 체결 비율은 여전히 54.8%에 머무르고 있고, 서면계약 중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은 66.0%에 머무르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예술인 실태조사), 표준계약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실질적인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캐스팅 디렉터, 큐레이터 등에 의한 계약 이전 활동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방송콘텐츠의 재방송·재판매 등에서의 저작권불인정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문시 BTS의 경비와 출연료에 대해 여행경비만을 지급하고, 출연료 등 인건비는 업체 자체부담을 이유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술인들은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 비율이 높아 직업적 안정성과 수입이 낮아 복지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다. 예술인 중 전업예술인 비율은 55.1%인데, 전업예술인 중 78.2%, 겸업 예술인 중 72.2%가 프리랜서이다(2021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으나, 가장 안전망이 필요한 저소득 예술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속칭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정작 최고은 같은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 발생하고 있다. 즉, 2020. 12. 20.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입되어 9만 5천명이 가입하였으나(2021.12.2. 고용부 통계), 월 평균 예술소득 50만원 이상이 가입자격으로 연 소득 73.0%가 연 소득 5백만원 미만으로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다.⁶⁾

코로나 19로 인하여 문화예술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문화예술은 문화시설 폐쇄, 관객수 제한 등으로 전반적으로 1/4 수준으로 문화시장이 축소되어 안전망 및 지원이 시급하다. 2020년 영화관 관객은 73.7%가 감소하였고(영화관통합전산망), 2020년 공연건수는 71.7%가 감소하였다(문예연감-공연예술통합전산망 비교).⁷⁾

6) 이 수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2018 조사 56.2% 보다 악화된 것이지만, 안전망은 이러한 위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월 평균 50만원 이상 예술소득 예술인으로 직전 24개월간 피보험 가입기간 9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발생한다(프리랜서 위주인 예술인 특수고용형태 고려).

7) 연간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술분야 2020. 1~8월까지의 피해액은 약 1조 5,617억원, 고용예술인의 인건비 피해액(인건비 삭감, 무급휴가/휴직, 권고사직/해고 등)은 약 7,391억원, 프리랜서 예술인의 피해액 약 7,029억원 등 총 3조 37억원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코로나 19 문화예술영향 예술인실태조사).

2)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 및 예술인 안전망 구축

법령에 따른 공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자, 문화기업간 공정한 계약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공정은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이므로 정책 우선 순위가 높을 것이다. 법령에 규정된 공정한 계약, 표준계약서의 확립뿐만 아니라 예술인이 예술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선하고자 한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월평균 50만원 미만 저소득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 차액을 지원하여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안전망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비용은 적게 소요되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가입대상이 낮은 산재보험의 확대를 위한 정책도 검토할 것이다.⁸⁾

출연료 체불 예술인 및 생활고 예술인을 위한 긴급 구호 지원 등을 위한 안전망 제도도 도입하고자 한다. 실물자산이 없거나 적은 문화기업의 특성상 출연료 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적고,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특히 경력이 짧은 예술인, 단역, 스태프 등이 주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 현재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긴급 구호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2022.9.25.)은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 상황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상 위원회가 포괄적인 기능으로 예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와, 분산된 공정 관련 제도의 체계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비정규직·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의 공정계약과 저작권 권리 등은 담은 표준지침 마련 및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전담기구 설립 피해 예술인 보호 및 윤리성 회복 등을 공약하였다.

3) 예술인 맞춤형 지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한다.⁹⁾ 전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작·스타트업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이 조성한 공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자력으로 이러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을 위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8)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예술인임대주택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당선인 공약의 전반적 기조상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9)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를 창작빌리지 확충으로 제시하였다.

창작활동의 특성에 따라 분업, 협업 전시, 공연, 교육 등의 목적에 맞는 복합공간 조성, 예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예술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존 예술인들을 위한 과학기술·예술 융합 재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청년예술가·예비예술가에 대해 다년간 지원, 창작·발표·교류공간 대폭 확대, 문화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예술가 포함을 제도화하여 청년예술인들의 성장과 문화 정책 참여를 제고하고자 한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예술인 위주로 개선하여 예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4) 예술지원 재원 확보 및 예술지원의 자율성 구조 혁신

예술지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조 혁신에 집중할 것이다. 예술지원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예술재원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은 기금 고갈위기에 놓여 있고, 매년 국고출연, 타 기금 전입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여건이다. 2022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격감으로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공약에서 타기금 전입 축소가 제시되어 향후에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추진할 것이다.

1회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을 다년간 예술인·예술단체 지원 위주로 전환하여 역량제고 및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구조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지원의 비중이 높아 프로젝트 지원은 창작활동 및 발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년간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식은 예술활동의 주기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예술지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은 예술인 단체의 역량개발, 달성 목표 중심으로 결정하고, 성과계약을 통해서만 평가하며, 활동내용은 예술인·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물론 예술활동의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지원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칸막이가 심한 문화예술기관을 정책개입이 필요한 문화복지와 자율성이 핵심인 예술지원 기능으로 통폐합하여 문화복지의 효율성 확대 및 예술지원의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6. 맺음말

공약에서 제시한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은 전체적인 가치와 철학, 미래가치, 문화의 여건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혁신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인수위원회 및 향후 국정과제 확정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공약개발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였으므로 국정과제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지 않는 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분권과 문화자치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이념 과잉에서 문화예술의 고유성,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문화를 통한 지역의 변화와 발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민주주의 자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다수가 배제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거나, 우월적인 엘리트 의식으로 주민을 계몽하려는 관점도 지양하고, 진정한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2 제1차 강원문화포럼

“현장이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

좌담

좌장 :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Section 1. 문화분권 문화자치Ⅰ ‘문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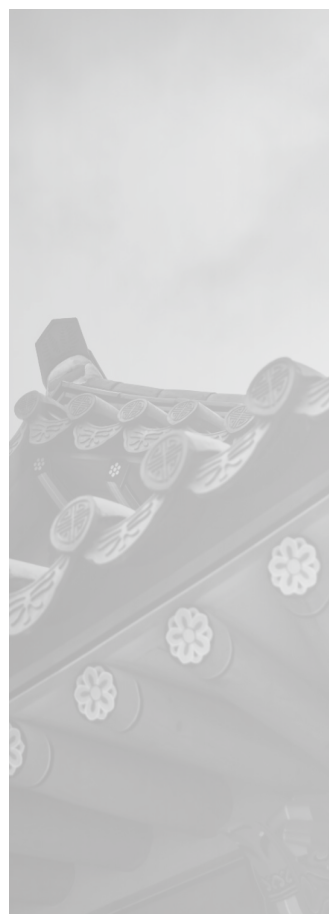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유영심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부센터장
제현수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

Section 2. 문화분권 문화자치Ⅱ ‘문화재단’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Section 3. 예술진흥 ‘예술인복지와 예술지원’

정 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이홍섭 전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원영오 극단 노틀 대표
문유미 조각가(청년예술인)



1. 차기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 차기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공약도 선언적 의미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새정부 문화공약>

-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구축
-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 K-컬처 콘텐츠기업 지원
- 정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국민 스포츠권 보장
-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 체육재정 확대
- 전국 차박 명소 1만여개 발굴 및 개방

<새정부 강원지역공약>

-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 광역교통망, 항만인프라 확충
-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육성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 탄소중립특구 조성
-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 “문화분권-문화자치”의 기조에서 추진한 지역화의 지속화도 명시되지 않음.
- 다만 지역화의 기조를 담은 <문화기본계획>, <지역문화기본계획>의 만료 시기가 2025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나 운영의 초점은 정부 기조에 따라 변동될 것임.
- 2022년 계획 예정인 <문화예술종합계획>은 현 정부의 기조를 담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2. 문화분권·문화자치의 방향이자 실험으로서 문화도시

- 문화都市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한 계획으로 도시를 문화적 관점에서 재활성화하는 정책사업임.
- 문화都市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지역문화정책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도시브랜드로서 문화都市에 대한 열망이 표출됨.
- 문화都市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은 삶의 터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기에 지속적 추진이 요구됨.

-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 아래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형성 활동.
- 도시문화 활성화로 사회 성장을 이끌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
- 각 부처의 정책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주민의 시선으로 도시문화 속에 재배치하는 사업

3. 변화하는 삶의 위기에서 강원형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설계 필요

- 기후 위기, 질병, 인구감소 등 총체적 재난 속에 강원도민의 삶을 설계하는 일상문화 확장 필요
- 인구감소, 도시소멸의 사회적 위기 속에 출산정책보다 인구 유입을 위한 “살고 싶은 문화 여건” 조성 필요
- 읍면동 중심의 문화생태계 회복과 기반 구축으로 실천적 문화여건 개선 필요

- ① 생태적 가치를 강화한 강원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 실시
- ②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강원도문화도시조례 제정
- ③ 읍면동 중심의 187일상문화마을 추진
- ④ 도민 문화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과 사회적 일거리 창출
- 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도시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 ⑥ 중앙부처별로 분산된 국고지원 사업을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문화자치시민위원회 추진
- ⑦ 도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학점제 지역문화기획실습과정 운영으로 청년과 지역의 연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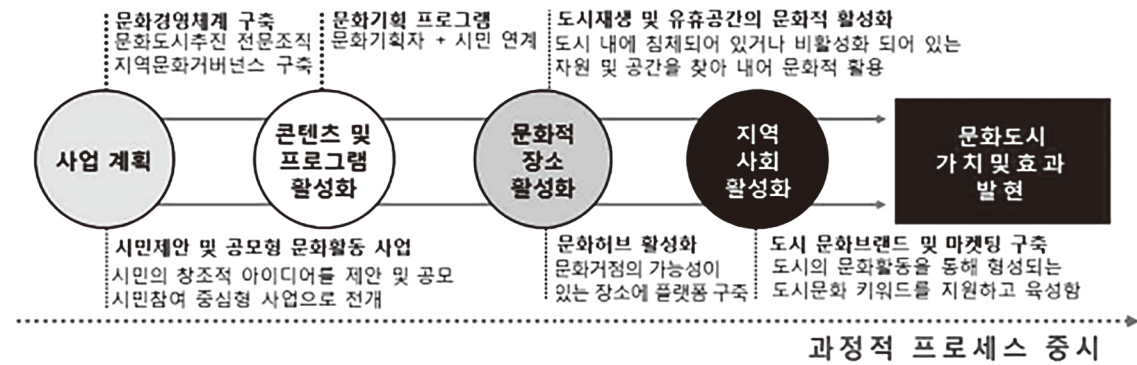


1. 문화도시의 추진 배경

-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 지속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확산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제기
-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제도 확산 필요성 인식

2. 문화도시 추진방향

- 대규모 시설 지원이 아닌 지역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
- 중앙 주도,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문 컨설팅을 위한 센터와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체계화 및 효율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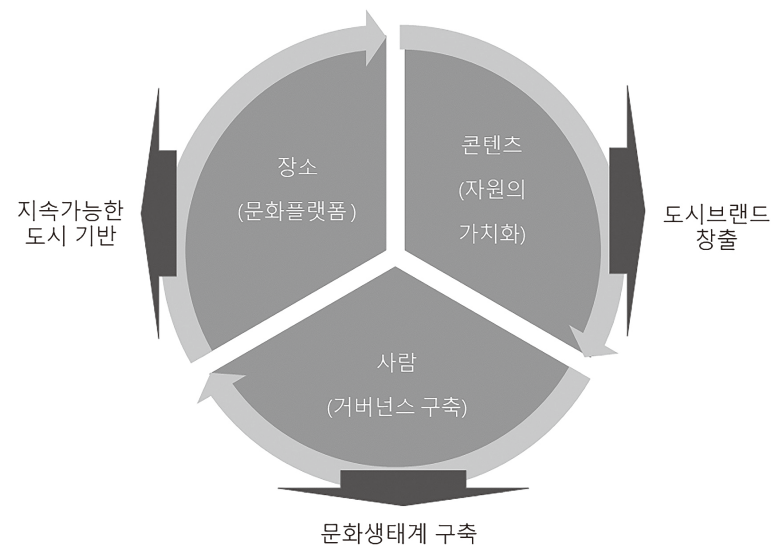


<그림>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방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이슈

- 장소: 새로운 인프라의 확정 및 조성이 아닌 기존 공간(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문화장소 및 허브로 하여 문화클러스터 확대
- 콘텐츠: 지역문화가치 및 자원의 재발견·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기획
- 인력: 지역주민, 청년 등을 새로운 문화리더로 양성



4. 정책과제

▶ 문화적 균형발전:

- 광역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 단체간을 중재하는 매개자로서 기능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간 균등한 자원의 배분을 통한 문화적 균형발전 추구 노력
- 지역문화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기회 확대
- 문화도시간 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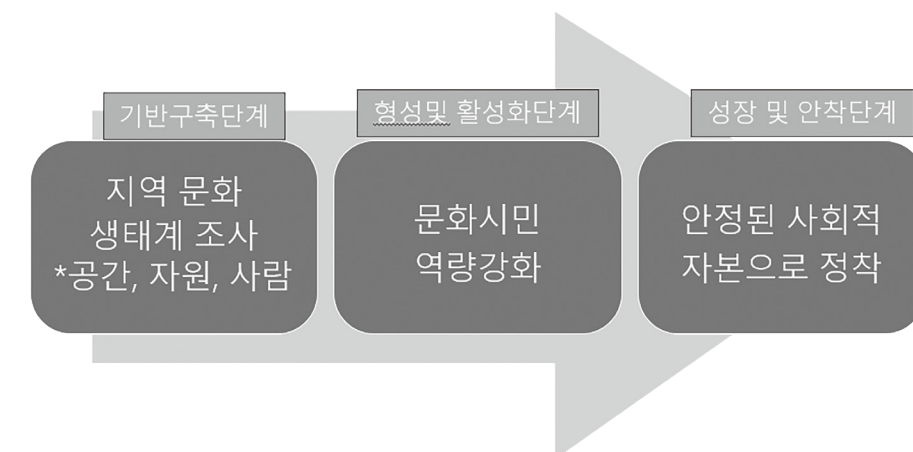
- 시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고
- 민간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협력적 지역거버넌스구축과 시민자치역량의강화

▶ 정책의 효율성

- 개별사업, 단발성 사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정책 비전 및 추진 방식을 바꾸는 접근 필요
- 문화 관련 정책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전문기관 설치 및 효과적 운영안 마련

▶ 문화자치 및 분권 역량강화

- 강원도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정례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 예술창업 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강화
 - 시민들의 동호회나 클럽 등을 생활문화차원에서 육성
 - 이들의 공연관람료나작품구매비 보조하는 전향적인 방식 고려
 - 새로운 관객 창출의 전략 홍보방안 모색:위케이션등을 활용하고 청소년 또는 가족 관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할인 프로그램 추진
 - 창의 인력 양성지원
- 예술기획자 육성: 예술가 활동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됨, 지역유입 전문가 지원제도 강화
- 한류와 k-pop등과 연계한 대중문화 영역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마케팅 전략에 정책지원
- 공연 시장을 활성화 및 전문 아트페어를 통한 작가 판매망을 구축지원
- 지역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인 지역학 육성



<그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추진 단계



원주, 문화도시

원주 문화도시,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도시의 지정은 문화도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적 준비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더욱 열심히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경로를 상상하고 실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더 큰 상상과 더 많은 실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민과의 만남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원주테이블의 운영을 체계화해서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문화도시를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문화의 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첫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에서 문화마을로, 더욱 깊숙하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예술가와 청년, 그리고 주민이 함께 문화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는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해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한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를 기반으로 시민공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문화도시의 모습을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도시 곳곳의 장소를 무대로 펼쳐지는 도시문화축제 닷 닷 다앗은 올해 보다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도시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도시문화의 새로운 담론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매개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도시예술활동 확장, 문화도시 거점공

간 진달래관 운영, 그림책도시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협업 등도 문화도시 원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시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채워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도시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해서는 이제 도시에서부터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점점 커져가는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읽어내고, 현명하게 기회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시민의 좋은 삶을 설계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도시로 전환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원주 문화도시

원주 문화도시,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주 문화都市는 새로운 성과 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원주시는 ‘원주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2022~2040)’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기획예산과 내 지속가능발전TF팀을 신설하여 담당부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진행하였으며, 수립과정에서 행정(W-SDGs수립 담당부서 및 이행계획 담당부서), 주요이해관계자그룹(원주-MGoS: Major Groups and otherStakeholders),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시 소통구조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의 논의하는 상호소통을 통해 올해 1월 기본·이행 계획서를 완성하였습니다.

UNSDGs	W-SDGs (17개)	중점과제 (17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 (114개)	성과지표 (125개)	담당부서
[원주시 목표지표] 창의문화산업 종사자 비중 : 1.5%(2020, 추정) → 6%(2025) → 11%(2030) → 20%(2040)						
Goal 9	생태환경 기반 창의문화산업을 육성해 문화로 혁신하는 도시모델을 만든다	창의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① 창의문화산업 기반 강화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창의문화자원 리서치 사업 실시 여부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확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여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사업 추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사업 추진 여부	
			② 생태문화산업 기반 조성	생태문화자원 리서치사업 실시	생태문화자원 리서치사업 실시 여부	관광정책과
				생태문화자원 발굴 지원제도 추진	생태문화자원 발굴 지원제도 추진(조례제정) 여부	
				생태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 실시	생태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 개수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 - Goal 9의 내용]

〈출처 :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무엇보다 원주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정을 통해 원주시 행정(W-SDGs수립 담당부서 및 이행계획 담당부서 22개)과 지역사회(시민속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의 의미있는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울러 주목했던 대목은 지속가능발전과 문화도시에 관한 접근이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원주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다져온 경험을 토대로 창의문화 산업을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주요이해관계자그룹과 지역사회에서도 20년 뒤 시민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요건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도시발전의 중심이 창의문화로 이동하는 담대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문화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첫 시작으로 원주 고유의 생태자원을 포함해 지역 내 잠재적인 인적, 물적 창의문화 자원 및 스토리를 함께 발굴하고 문화생태계 조성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정책의 연계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은 2040년 지속가능한 원주시를 위해 시정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동시에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시정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중장기 로드맵이기도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도시발전 방향의 가이드라인이자 로드맵 속에 문화도시가 중요한 전략이자 과제로 논의되고 제시하였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문화도시를 장르나 영역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도시의 가치와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문화적 가치로 성장하며 문화를 도시발전 전략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원주 문화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이 아닐까 가늠해 봅니다.

도시와 시민의 시대, 문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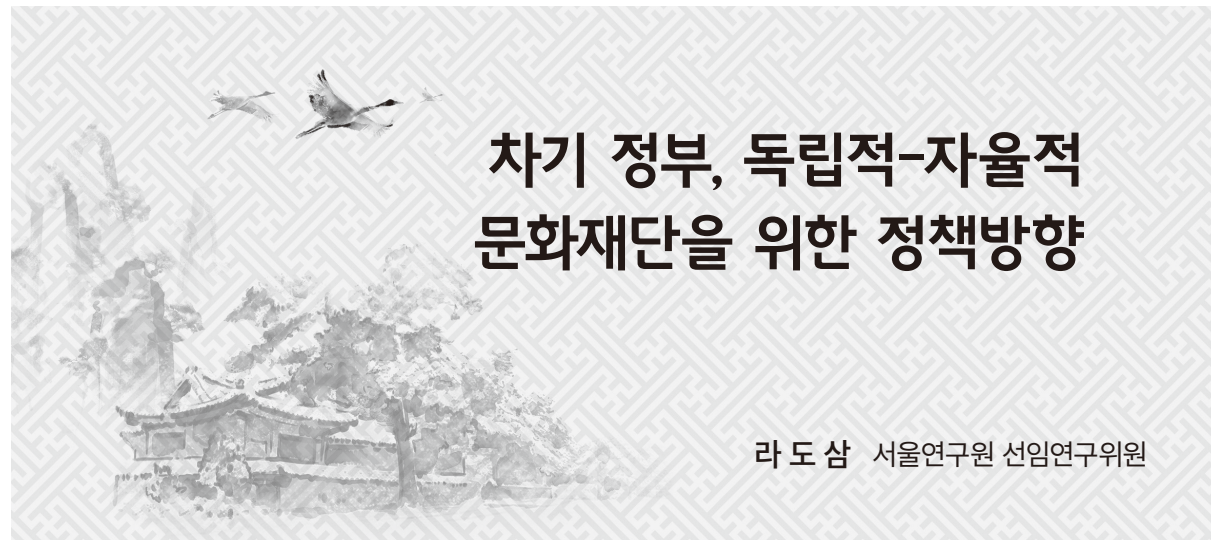
원주 문화도시,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주권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문화 관련 정책공약을 챙겨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지만, 대다수 후보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문화 분권과 자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도시를 공약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문화자치와 분권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아야 합니다.

문화도시 입장에서 보자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자치와 분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주 문화도시에서는 시민 실천형 거버넌스 원주테이블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문화자치의 실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역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문화에 대한 담론과 실천 방안을 만들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53개 테이블, 692명의 시민이 원주테이블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더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원주테이블 활성화가 불러온 성과로서 ‘아카데미극장테이블’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공간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문화도시는 시민과 거버넌스가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책 경로, 상향식 의사결정, 모든 도시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창의성을 발현하여 역동적인 도시문화와 모두를 위한 특별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문화 분권과 자치의 기반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문화도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원도 버전의 문화도시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초 지방정부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자신의 여건과 경로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는 별개의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협력적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와 투자 정책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문화도시의 실체는 장르나 영역, 조직이 아닙니다. 좋은 삶에 관한 상상과 실험, 그리고 경험이며, 보다 나은 사회, 새로운 사회질서를 향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문명의 토대를 정비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 원주의 비전은 36만 5천명 원주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 문화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이 과정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원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강원도의 모든 도시와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도시문화로 특별해지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강원도형 문화도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1. 무거운 짐을 진 아이, 문화재단

일반적인 경우, 문화재단에서 일하거나 관계한다고 하면 ‘ 좋겠다’ 라는 애길 듣습니다. “공연보고 전시 많이 봐서 좋겠다”란 애기부터 시작하여 “그냥 ‘문화’ 라는 다소 선망(!)이 되는 분야에서 일하는 만큼 좋겠다”라는 인상비평까지 별로라는 애기보다 ‘ 좋겠다’ 라는 식의 평가를 받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일과 잡다한 업무, 여기저기에서 나무라는 듯한 사람들로 공연이나 전시를 보기는커녕 야근이 일쑤고, 축제와 같이 함께 느끼고 즐겨야 할 곳에선 뒤에서 행여 무슨 사고가 날까봐 또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온갖 잡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주말은 거의 없지요. 주요한 행사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근무입니다. 때문에 재단은 많이 힘든 조직입니다.

더구나 재단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일이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면 힘들어도 재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이라는 게 체계적 결정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나 누군가의 아이디어, 요구에 의해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단은 이미 결정된 사업을 따르게 되고, 자율적이고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행정부의 결정사항에 의해 일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도 대부분의 재단이 △예술지원부터 △시설운영, △문화사업 기획, △각종 산하기관(센터, 연구소 등) 운영, △축제 등 행사 개최, △협회 및 단체 관리, △문화예술교육, △통합문화이용권 등 시민 향수 촉진프로그램, △정책연구 등 매우 다양한 사업으로 허덕이고 있고,

그때 그때 마다 발생하는 예술이나 문화관련 사업 혹은 공간운영 업무에 상당히 혼란스런 조직과 인사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을 두고, 지자체가 아닌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전달·시행합니다. 때문에 지역문화재단 업무 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사업입니다. 정부 어떤 기관도 지역문화재단에 출자금이나 출연금을 낸 적이 없기에 그 일을 거부하면 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막대한 사업자금에 지역문화재단은 무너집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지원과 출자·출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서 중앙정부 사업은 지역문화재단에겐 소중한 사업줄이자 생명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지역에서 떨어지는 자질구래한—정확히는 비체계적이고 비계획적인 업무—일과 중앙에서 떨어지는 위계적 업무구조 속에 시달리는 게 지역문화재단이지요. 지역문화재단 정책방향이 설계되려면 바로 이 점부터 논의되어야 합니다.

2. 지역의 문화재단,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지?

제가 오늘 맡은 발제는 ‘문화재단에 대한 차기 지방자치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재단 자체를 놓고, 차기정부의 방향을 논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문화재단을 활용(통)해 예술인이나 시(도)민의 행복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것일 뿐, 재단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매우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단이 만들어 진 게 1997년 <경기문화재단> 설립이었으니까, 벌써 각 지자체에 재단이 설립된 지 25년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재단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현재를 놓고 지방정부에 과감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정책토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총17개 광역문화재단(경남문화예술진흥원 포함)이 있고, 113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있습니다. 17개 광역문화재단은 전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로 묶여 있고, 113개 기초문화재단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엄청난 수로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미션이나 안정적인 출자·출연금을 갖고 설립된 문화재단은 많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해 그나마 좀 나아졌습디만, 사실 이전에는 지역에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맡기거나 축제 행사 대행, 혹은 타 지역에 재단이 있는 만큼 우리도 만들겠다는 식으로 만들어 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시설이나 행사(축제) 운영 외 마땅한 미션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등 중앙정부 예술지원 기관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지역문화정책 체계는 그렇게 많이 왜곡된 게 현실입니다. 특히 5년 간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나오는 ‘문화도시’의 경우, 지역의 문화재단에는 새로운 미션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사업을 위해 뛰거나, 이 사업을 목적으로 탄생하는 재단 또한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이 현실이 아닌, 재단의 미래, 차기 자치정부에서 재단에 대한 정책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왜 설립되어야 하는 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단에 대한 정책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단을 세우는 것은 영국 예술위원회로부터 나온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때문입니다. 문화나 예술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를 주관하는 만큼, 어떤 정부가 들어선 다하더라도 정부의 입김에 휘달리지 않도록, 예술인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갖자는 점에서 본래는 ‘위원회’ 형태로 설립해야 하나 1976년 설립된 <문화예술진흥원> 모델에 따라 재단으로 설립되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즉, 예술가 스스로 자신을 지원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갖도록 하자는 게 문화재단이지요.

그러나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평가를 받듯, 지역문화재단 또한 출자출연기관 관리라는 틀로 관리되며 운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술지원과 재단설립의 고유성, 즉 팔길이 원칙을 멀어지게 됩니다. 재단 내 조직과 인사, 사업 등은 늘 관리·감독되며 그 자율성을 잇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바로 이 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재단의 자율성, 재단설립의 본래 목적인 ‘팔길이 원칙’과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가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마도 차기 지방정부는 이 점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계) 스스로의 자기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정기관-산하기관으로서 일합니다. 그 대부분은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주관하지요. 우선, 지역에서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로서 일을 합니다. 예술기획을 하거나, 축제를 기획·주관하거나 문화행사, 시민문화활동 프로그램, 문화적 지역개발 등을 하지요. 이들은 지역에서 ‘문화 혹은 축제, 관광, 심지어는 예술기획자’입니다. 이들은 이 업무를 통해 지역을 만들어 가며, 활성화시키고, 시(도)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갖도록 하지요. 이게 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운영자’로서 일을 합니다.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운영관계 일을 합니다. 이들은 이 공간과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에 좀 더 풍성한 문화적 자양분이 자라길 원하고, 문화적 감성과 예술활동이 촉발되도록 원하지요.

셋째, 지역의 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발전의 토양이자 기반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하며 지역의 예술생태계를 보전·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1976년 처음으로 예술지원 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현 문화예술위원회)이 생긴 이래 예술지원 업무는 지역문화재단의 고유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든, 자신의 출자금(기본재단)에서 나온 이익금이든, 정부의 사업비 등 다양한 재원으로 문화재단은 예술지원 사업을 합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문화재단은 기획자이자 운영자, 지원자로서 역할 합니다. 때문에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여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그 문제를 따져볼까 합니다.

3. 자율권을 부여하라.

2020년 전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공동으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 방향과 과제에 대한 지역문화관계자 설문조사 분석’을 의뢰합니다. 연구소는 코로나 19에 대한 지역문화재단의 위기대응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제시합니다.

설문항목	재단종사자	문화전문가
기존 지원정책 관성에 집착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고 있다.	3.17	2.75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3.46	2.83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은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다.	3.29	2.87
문화예술현장의 의견 수렴을 활발하게 했다.	3.40	2.85
다른 지역문화재단들과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3.30	2.71
데이터(예술인실태, 피해상황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2.81	2.40
위기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확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2.49	2.35
위기 상황에 적합한 정책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다.	2.91	2.44
긴급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회복 및 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3.29	2.66

출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 방향과 과제, p.94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습시다만, 유독 박하기 짝이 없는 세 점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체계, 재정확보, 정책기획역량 등이 그것이지요. 코로나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긴급한 위기였고, 적절한 대응이라는 사회시스템을 점검하는 역할도 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는 3가지, 즉 △데이터가 없고, △돈이 없고, △기획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의 재단이 그 여건과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결과이겠지요.

바로 이 점이 재단의 현실입니다. 재단은 우선,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습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문화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문화관광체육국 내 문화예술과를 두고 있지요. 사실 문화재단이 독자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진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재단 설립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내에서 예술지원이나 문화기획과 관련된 업무는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보다 좀 더 다른 역할을 해야지요.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저는 예술지원정책 혁신과 관련하여 정부와 산하기관 간 중복성을 회피하고자 예술지원 및 장르별 업무-시각예술과, 공연예술과 등-를 예술생태계, 예술시장 등과 같이 거시정책을 다룰 수 있는 분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랜 행정 관행 상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저는 행정부서는 문화재단과의 업무중복을 피하고, 강원도 전체의 문화-예술생태계와 예술시장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지역 내 예술 및 문화기획·지원 업무는 재단에 과감히 이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역할 분담과 재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란 허울이지요. 이와 관련해선 통상적으로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에 몇 퍼센트 예산을 쓰겠다는 공약이 있으나, 재단에 얼마나 출연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 재단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부서를 두지 않고 재단에 모든 예산을 맡긴다면 예술지원 및 문화기획 예산은 재단예산이 될 것이며, 단지 '몇 퍼센트' 예산이 아니라 예술인 및 문화기획인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예산 몇 퍼센트를 갖겠다는 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우월하고, 예술과 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배려한 발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지 몇 퍼센트 문화예산 할당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몇 퍼센트의 문화예술 예산 확보로 설명되는 방식이 되었음 합니다.

이처럼 재단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주는 대신, 재단에도 분명 요구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지역 예술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모니터링 보고서나 지역 예술의제 보고서 등이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공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예술인 실태 및 피해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건, 재단이 평소에도 예술인들의 실태를 거의 관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산이 없어서도 그렇겠습니만, 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문화부문에 거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문화'라는 이념적 부서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근무 처음부터 데이터를 형성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 데이터 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서는 데이터로 말합니다. 그러니 만큼, 문화재단은 그 어떤 업무 영역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지역의 예술(인)상태와 문화상태, 지역별-권역별 문화전략을 짜며 지역문화

전반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문화재단의 기획역량입니다. 기획역량이 높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기획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획하면 사람들은 '교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육이 안 돼 기획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책임과 처우의 부여입니다. 적절한 처우와 책임있는 권한을 줘야만 기획역량은 높아집니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가 문화재단 직원 및 예술과 문화기획자에게 적절한 처우와 책임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분야는 그 어떤 분야에 비해 교육자본이 많이 투입된 분야입니다. 분야 성격 상 한 두 개의 외국어는 해야 하며, 행정업무부터 기획-관리-회계 업무, 매니징 업무까지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분야는 시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낮은 처우를 받습니다. 그 결과 재단 직원도, 재단을 베이스로 일하는 기획자도 낮은 처우를 받습니다. 처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업계 평균입니다.

이 처우로 일할 기획자는 없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존중하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에 기획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 특히 지방에 있어 기획자는 중요합니다. 지역이란 자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해 몇 개의 아이টে를 통해서도 전국적 혹은 세계적으로 지역을 빛낼 수 있으며, 한 순간의 잘못으로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탑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그 성격 상 아무리 뛰어난 지자체 장이라도 기획자가 없으면 현실화가 안 되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기획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업기획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갖춘 기획자들이 많아져 강원도 곳곳이 다양한 문화로 꽃피길 기원해 봅니다.

이로서 저는 차기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역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가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의 자율과 독립보장, 또 이를 위한 도와 문화재단, 시와 문화재단 간 완벽한 역할분담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법제의 마련(선진적 분권과 협력체계 마련), △안정적 문화기획과 예술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예산 확보와 재단 출연금 전환, △문화·예술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문화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입니다. 보다시피 이 모든 건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자세를 바꾸고 보면, 현실을 인정하고 보면 쉽게 해결할 일이고, 해결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과 같은 정책토론회를 만든 강원도이기에, 저는 이런 정책이 다른 지역에 앞서 강원도에서 실행되길 기원해 봅니다.

강원도의 힘! 그것이 강원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지역문화재단 25년, 성찰과 과제

황 순 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한국 최초 민간 공익문화재단의 위상으로 창립된 지 25년이 지나고 있다. 1997년 850만명이었던 총인구수는 2021년 9월 현재 1,390만명으로 약 64%로 증가했다. 이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최대 지자체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의 책무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있다. 경기도 문화정체성의 확립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출범했던 경기문화재단이라는 모델은 지난 25년간 강원문화재단(1999년)의 출범과 전국 최초 기초문화재단인 부천문화재단의 출범(2001년)을 견인했고 2020년 경북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모두 설립되어 현재 140여개의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현원기준 52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어 추산컨대 전국의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인력 종사자 수는 7천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지역문화를 일구는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단의 확산 현상은 본격적인 지역문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방증이자 앞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지역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고이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사반세기전 열악하기만 했던 우리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절실함과 더불어 쏟아지는 국가정책을 원활하게 소화해 현장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지역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문화 기획자의 역할,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통하며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만연했던 팬데믹의 시간동안 지역문화재단은 총체적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생태계의 정책적 열악함과 사회적 취약함에 대응해 예술인 안전망에 대한 진단과 변화를 모색했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등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 전반

에 걸친 사회적 책임과 정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의 확대는 문화예술정책의 우선순위를 상향시키는 정책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최근 문화도시로 표상되는 지역문화 브랜드와 지자체별 정책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문화재단들의 변화와 성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디지털 전환, 초연결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 새로운 세대의 진입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예술정책과 공공서비스 체계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조직화 해내지 못하고 일반 행정시스템의 하위 전달체계로 인식되거나 오히려 문화예술현장의 상위 갑질 기관으로 인식되기도 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9일을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문화정책의 변화와 다가오는 6월은 지방선거로 인해 각 재단의 리더십의 교체되는 등의 정책과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과 역량 그리고 사업 등 전반에 걸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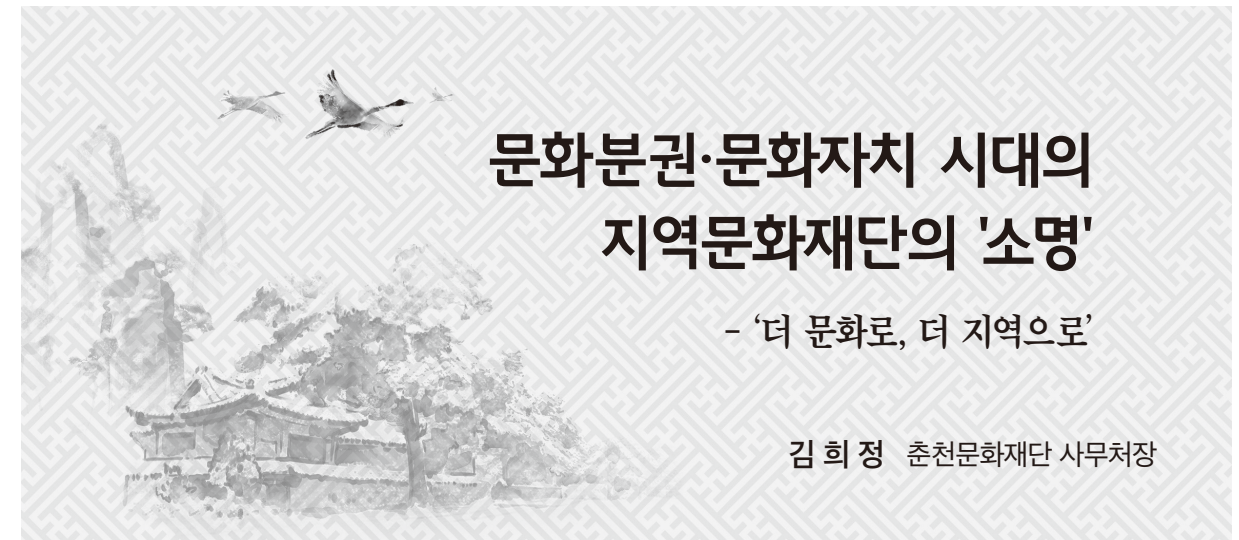
첫째,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비단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현상만으로는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 이미 온라인 공연, 가상전시, 웹기반 축제 등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의 확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비용의 증가로 인한 양극화, 저작권의 문제, 디지털 격차와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정책과 전략으로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디지털 경기문화재단으로의 혁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지원과 문화사업의 지원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재단의 자원관리, 의사결정, 기록관리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보다 무엇보다 우선 하는 것이 재단 직원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확립하고 업무 방식과 고객 서비스 마인드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둘째, 관습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25년간 지역문화재단의 대표사업으로 상징되었던 이른바 예술인 창작지원사업(공모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2021년 기준 공모지원사업의 선정률은 7.4%, 선정액은 1.6%, 지원액은 사업비의 50%를 하회하고 있고, 그 예산마저도 총 26억원으로 서울103억, 부산 43억에 대비해 초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공모지원사업’은 그 정책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그 효과를 누리는 대상마저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소수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극 가지고 있어 그 정책적 효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지원에서 창작주체로서의 예술인 지

원으로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 기본소득에 준하는 이른바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제도를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인 예술인 기본소득을 정책의 기본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과 전략으로 예술인의 참여와 활동을 전제로 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인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법정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1차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구 등 7개 도시가 선정되었고, 2차로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강원 춘천, 전북 완주, 경남 김해 등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각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조직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문화도시 가치 발굴, 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경쟁 방식의 한계, 단발성 지원예산, 실적 중심의 사업 등으로 문화도시 정책은 그 본질적인 목표가 흔들리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문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형 예술도시 구상을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도시가 각각 자신의 오롯한 문화를 발현하고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도시모형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이 활성화되면서 각 도시들은 지역문화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 생활권에서, 도시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 인프라, 시민네트워크, 거점공간, 생활문화,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의 사업과 과제들이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기획과 지원활동, 공유와 협력활동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지역문화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광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즉 후원과 지원에서 공유자와 협력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기초문화재단들과의 역할분담, 광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제 역할 찾기도 이와 결을 함께 해 정립되어야 할 과제이다.

차기 정부와 민선8기의 주요 문화정책의 기조는 문화 자치 분권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제기한 바대로 현재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하고 해결해 나갈 과제와 문제는 재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구조적, 정책적, 장기적인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문화 분권은 국가정책에서 면밀히 다뤄야 할 것이지만 자치의 영역은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협치 역량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 문화행정기관의 수준에 머무르고 지자체 대행사업에 치여 그로기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문화재단’이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일들을 찾아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일이 남아 있다. 지난 지역문화재단 25년의 역사가 보여주듯 앞으로의 활로는 우리의 ‘용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민선8기 정부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선거가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해아래 새로운 문화공약은 눈에 띄지 않으나 ‘문화자치 시대’라는 키워드만큼은 대선 후보에게든 민선 후보에게든 가장 손쉽게 꺼내드는 정책 언어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차치하고 말이다.

-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시대에 문화재단의 ‘역할’을 넘어선 ‘소명의식’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2022년 3월 기준, 전국에 116개의 재단이 설립되어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서 인구 1만 명 이상의 지자체가 162곳이고 인구 5만 이상 시군이 110곳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점에서 재단을 운영할 여력이 있는 대부분의 시군에 문화재단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각 지역마다의 기반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재단의 역할과 역량, 조직구조나 종사자의 처우 등에는 다소의 온도차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조례와 민법만을 근거로 설립되었던 환경에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기구이자 본격적인 지역문화정책수행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여전히 지자체의 축제 운영이나 공간 운영의 필요 때문에 설립되는 경우도 많지만, 적어도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주장할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재단 정체성 확립의 기본적 환경은 구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 지역문화재단 설립등)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21조에서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1.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문화정책 개발과 실현의 주요 파트너로서 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단이 이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가. 지역문화재단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을 가로막는 많은 일선의 문제의식들이 지난 수년간 있어왔다. 시 집행부인 행정과의 관계에서는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한계를 절감하는 다양한 위기들이 있었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는 일종의 ‘갑’의 기관으로 끊임없는 지탄을 받으며 ‘관(館)’의 대변인으로 위치 지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때로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흔들리기도 하고 조직 수장의 경향에 따라 재단이 가지는 비전이 전혀 엉뚱해질 때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문화재단은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내적 체력을 길러낼 수 있었던가 반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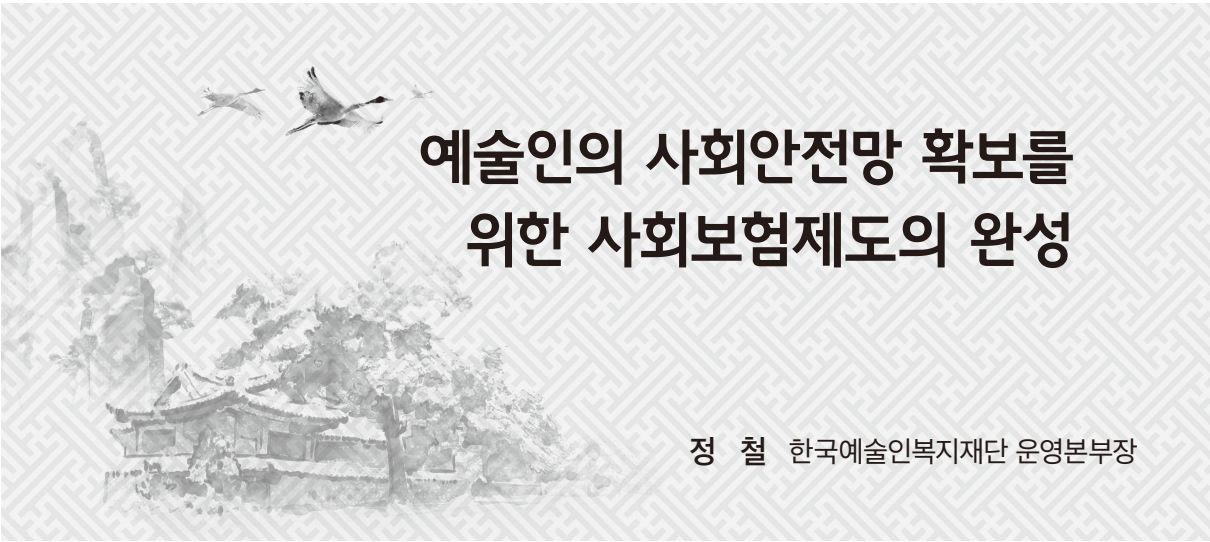
이글의 제목에 역할이 아닌 ‘소명’이라는 관념적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과, 재단이 갖추어야 할 자기의식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내포한 의미이다. 역할은 규정받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측과 수행하는 측의 인식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수감 기관의 위치에 있다할지라도,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전문적 역량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지역자치시대에 걸맞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재단을 대하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적 지위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기한지 이미 십 수년이 지났지만, 많은 도시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데는 이런 인식의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여겨진다. 재단 역시 많은 혁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안고 있다. 관료화되고 경직화된 관성적 업무태도와 기계적 반복의 업무 수행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정확히 니즈를 분석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축해 나가는 전문가의 역량과 열정을 구비해야 한다.

양측이 가지는 적정한 인식의 균형감과 그것으로부터 발인되는 파트너십의 형성, 그에 따른 정책파트너로서의 지역문화정책의 성과를 실현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지역자치·문화자치에서 요구되는 거버넌스 구축이란 말로 치환하겠다. 물론 지역자치·문화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과의 거버넌스 형성이기에 지역문화정책의 파트너로서 ‘예술가시민’과 일반 시민과의 협치 과정 안에서도 동등한 인식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수준있는 문화분권, 문화자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이에 대하여 수년간 꾸준히 공식 석상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이 더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며, 지역문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관계맺고 있는 – 행정과 정치를 포함하여 –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있는 인식이 꼭 필요한 때임을 절감한다. 그 안에서 문화재단은 일종의 자기역할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문화로, 더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때임을 환기하고 싶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 실업, 질병, 노령 등 생활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은 보험금 분담의 원칙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원칙이 반영됨.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예술인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수준인데,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50%에 못 미치고, 공적연금 가입률은 납부예외자를 미납자로 분류 시 52.2~62.5%로 나타남.

한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예술인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술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된 자영예술인 중 과세표준 보유자는 절반 수준(50.2%)에 그침.

이는 신규 자영예술인의 대부분이 소득공제를 통한 면세구간에 속한 정도로 저소득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예술인 등록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업 예술인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과거보다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비율이 높아져 전체인원 중 69,410명(52.00%)에 달하였고, 예술인 상당수가 프리랜서, 임시·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음.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규모 변화 (2016~2022)

(단위: 명, %)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6	2,869	7,881	625	5	5,731	1,541	1,653	7,020	3,507	1,841	544	1,514	34,731
2017	3,991	10,063	832	11	8,194	2,134	2,084	9,057	4,774	2,433	849	2,237	46,659
2018	5,143	12,479	1,079	22	10,399	2,696	2,403	10,406	5,733	2,948	1,236	2,873	57,417
2019	6,082	14,188	1,278	27	13,254	3,289	2,802	11,824	6,566	3,806	1,658	3,790	68,564
2020	8,606	20,126	1,839	38	22,538	5,138	3,775	14,691	7,798	5,526	2,224	6,283	98,582
2021	11,621	27,564	2,726	62	31,972	6,450	5,057	17,044	9,015	6,897	2,750	8,292	129,450
2022	12,398	28,545	2,756	64	33,205	6,596	5,161	17,356	9,185	7,117	2,837	8,572	133,792
비율	9.27	21.34	2.06	0.05	24.82	4.93	3.86	12.97	6.87	5.32	2.12	6.41	100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2.3.22.기준), 강원 2,890명 (2.16%),

사업소득 신고 및 과세표준 보유 자영 예술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예술인									그 외 인적 용역	인적 용역 전체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배우, 탤런트 등	모델	가수	성악가 등	연예 보조 서비스		
사업소득원천징수자(A)	229.3	82.1	16.9	18.7	18.5	9.5	8.4	9.6	65.6	6,362.70	6,591.90
과세표준보유자(B)	115.2	30.9	11.2	8.5	10.4	4.6	5.6	5.6	38.3	3,484.73	3,599.93
비율(B/A)	(50.2)	(37.7)	(66.0)	(45.4)	(56.2)	(48.5)	(67.0)	(58.8)	(58.4)	(54.8)	(54.6)

자료:국세통보연보(2020), 문현경 외(2022)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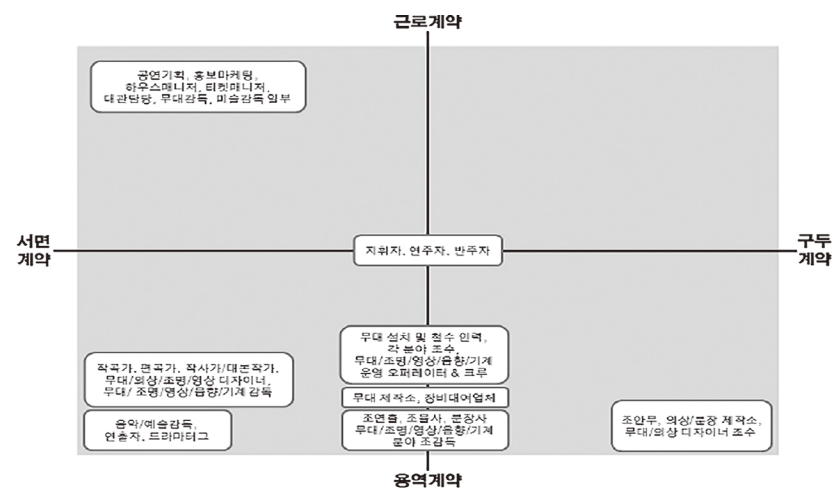
예술인 상당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예술 활동을 영위 중. 저임금 예술인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예술 활동이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특성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 노동 과잉공급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임금수준이 열악함(강익희, 2011). 예술인은 노동기간이나 노동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일자리의 부재

(jobless)보다는 무소득(incomeless)에서 발생하는 빈곤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특징이고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워낙 적은 탓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거나(겸업), 가구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개임. 일부는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도 하나, 상당수의 예술인들은 ‘단기계약’ 또는 ‘도급하청관계’에 의존하는 외부 노동시장에 대거 포진되어 있음(Alexander, 2003).

예술인의 노동 형태는 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성격으로 즉, 일반 노동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작품의 제작이 결정되면 제작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계약’ 형태를 띠며(차민경, 2020). 전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고용주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겸업예술인(2021년)은 42.3%로 나타나 과거와 비교할 때 그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양혜원 외, 2021). 예술인은 계약체결 전 상당히 긴 준비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은 예술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이나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실업상태로서 실제 서면계약은 주로 제작이 결정된 이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차민경, 2020).

예술 활동을 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은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설계된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실제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고,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도 성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타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님. 이런 가운데 열악한 외부 노동시장에 대거 위치한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수행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됨. 예술인 복지정책의 일환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음(차민경 외, 2020).

계약 성격과 형식에 따른 예술종사자의 분류: 음악 공연 분야의 사례



자료: 차민경(2020). 코로나19 예술포럼 2회.

그 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예술인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들이 실시 중이며, 지자체 단위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형편임. 사회보험은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임(이병희 외, 2012).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입자에게 정부 재원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기여부담을 낮추는 것은 사회보험이 갖는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자체 단위에서 영세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 1인 소상공인,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 현재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22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을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액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되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월(月)에 한하여 추가 지원을 함. 단,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된 경우, 기신청자에 한하여 월 8만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함.

- 1인 소상공인 지원(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2021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구분	내용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액 900만원 미만(사업장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 2개 이상 사업장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금액을 합산)
고용보험	-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자료: 강원도 홈페이지.

예술이 사회보험 제도로서의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예술인의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 즉 당연가입으로 하면서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산재보험 보수월액의 0,8%)을 부담과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의 9%(사용자4.5%, 근로자4.5%)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예술인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상대방인 보수 지급자(공공, 기획·제작사 등)의 지시와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음. 계약의 형식이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그 예술인에게 창작의 자유가 온전히 부여되는 것은 아님.

전통적으로 예술 활동은 자유노동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종속노동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 왔지만, 오늘날의 산업적 시스템에서는 적어도 독립 예술인의 경우가 아니라면, 보수를 받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과 비근로계약의 경계는 희미해 보임. 그것은 예술인의 활동이 단속적인 이유이기도 함.

정책적인 차원에서 당연가입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 및 제작·기획사에서 예술인과 출연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제작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제도를 당연 채택해야 함. 현재 특수고용종사자에 예술인을 포함하여 당연가입제도를 논의중 임. 제작사 측의 비용 부담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공히 직면하는 문제임.

외국의 입법례 중 독일과 이탈리아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사근로자, 자영업자 나아가 학생과 무급종사자 등에 대한 일반적 산재(재해)보험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지난 2020년부터 당연가입제도로 시행중임. 현재 피보험 가입자는 11만명에 육박함. 산재보험법은 가입신청에 의한 임의적용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법은 일정 소득 기준을 기초로 당연적용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예술인에 대한 별도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나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예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지원정책 등을 통합한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제도로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시 말하면 예술인이라는 직역에 대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요구해야 할 것임.

직역별 사회보험제도라는 시도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님. 우리나라에는 이미 직역별 재해보험제도로써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제도가 그 예임.



1. 들어가는 말

20대 대선을 앞두고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국민과 예술인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당선자가 확정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구성된 현재에도 이러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은, 5월 초로 예정된 인수위의 국정 과제 발표를 지켜봐야 제대로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어떤 것을 계승하고 어떤 것을 폐기할지, 선거 기간 중 내세운 공약 중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할지, 그리고 선거 당시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특히 힘을 합친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어떤 공약을 흡수할지가 인수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예술인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청

인수위가 발표할 국정 과제와 새 정부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혀 나갈지 현재로서는 쉽게 가늠할 수 없지만, 오늘 좌담의 소주제인 '예술인 복지와 지원'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꾸준히 마련되어 왔고, 이제는 정착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술인 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했던 최지은 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예술가의 비극적 삶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이듬해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한

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은 예술인 복지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제도,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등의 마련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복지재단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증진되었다. 이 법과 재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 지원과 최소한의 복지 안정망 구축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3. 차기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새 정부는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예술인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중앙정부·지자체·지역문화재단이 서로 잘 연계하여 예술인 복지가 기초지자체 예술인들의 피부에까지 외닿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밝혀야 하고, 적어도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 예산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예술인 복지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으로 시야를 확대해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예술인 권리 보장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공포되고 오는 9월 시행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그 단초가 되는 만큼, 시행령에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라는 흑역사를 배경으로 탄생한 만큼,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치적 각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4. 차기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제언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할 차기 지방정부도 예술인 복지 증진과 예술인 지원 확대라는 시대적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강원도 문화예술 지원의 축이 되는 조례는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지난해 제정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예술인 복지에 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을 다분히 행정 편의적으로 정하고 있

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제6조 제1항에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한 뒤 이어진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명시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범위는 강원도의 문화예술진흥 시책 전반에 걸쳐있어 예술인 복지에 관한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과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과 조례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술인 복지 지원을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의 설치 조례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를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5. 예술인 복지와 문화재단의 역할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인 복지 지원은, 재단의 직접 지원과 광역문화재단을 통한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도내 지원은 강원문화재단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타 광역문화재단과 비교하면 노력과 실적 면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도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노인, 청년, 장애인 등 소외 계층으로 복지 지원을 확대해나간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재단 내에 예술인 복지를 전담할 독립 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점이다. 타 광역재단의 경우 예술인 복지 전담 팀이 속속 신설되는 만큼, 강원문화재단도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행사성 조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강원문화재단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원문화재단 조직도는 경영기획본부, 문화사업본부,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강원영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강원영상위원회 등은 별도의 법인화를 통해 독립시키고 재단은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문화예술 지원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는 최근 빠르게 설립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대표 축제와 문화행사들을 문화재단에 떠넘기다 보니 정기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들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민간 전문가들 및 청년예술인들의 자질

과 능력을 믿고, 정기적인 축제와 행사들은 독립 법인화 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지원의 대원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화예술계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예술가들의 유입도 활성화할 수 있다.

6.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문화재단의 역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으면서부터 문화예술 정책을 국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전환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들 정책에 집중했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차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중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추를 맡은 곳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면서 공기업적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비해 공익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문화재단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강화라는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인 복지 및 지원과 연계되어 있고, 청년예술인들의 생계 안전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다.

7. 나가는 말

예술인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섹션의 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좌담에서 본 발표자는 예술인 복지와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고찰해 보았다. 창작자와 향유자 간 지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엘리트예술과 생활예술 간의 상호 시너스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산적한 쟁점들은 또 다른 포럼에서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예술현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존망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연예술 분야의 관객수는 어림잡아 코로나 이전에 비해 70% 감소했으며 현장의 창작활동도 50% 이상 줄어들었다. 더 걱정스러운건 대중들의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관객들이 다시 공연장을 찾을지 예측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연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현장 예술가들이 이미 자발적 폐업 상태인 경우도 많아서 기초예술분야 전체가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가 어렵다.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가운데 13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가장 최근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곳도 있다. 일면 기초문화재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손 댈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현장성 있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예술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프로그램의 변별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예술 씬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이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고유한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로 붕괴된 기초예술분야의 토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문화, 예술 지원책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는 문화, 예술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역의 문화, 예술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비전을 만들며 현장과의 능동적인 소통, 그리고 지역의 일관성있는 문화, 예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기능 위주의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문화, 예술지원사업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관련 부서, 기관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사업들이 현장 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 예산지원에서 머물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사업에 소통창구가되어 사업의 오류를 조기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도내 시·군단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상호 협력 할 수 있는 중재자의 기능도 가능하리라 본다. 시·군의 문화적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산지원만으로는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없다. 시의성을 담을 수 있는 정책위원회로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 예술인 복지센터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시국에 예술인 복지는 더욱 더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부분 프리랜서인 현장 예술가들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창작활동 그리고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소멸로 당장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창작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 긴급생계지원과 의료서비스를 찾아주는 일 등 중앙정부의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할 수 없는 맞춤형 예술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예술인 복지지원을 특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메카니즘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술가” 라는 직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섬세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

세 번째로는 (가칭) 공공예술창작센터를 들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예술가 집단의 절대적 규모가 적다. 이는 지역내에서 자발적인 예술인 양성과 교육, 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 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환경이 서울만 못한 상황에서 과감히 지역으로 내려 올 예술가들은 많지 않을 것이며 지역에서 성장한 젊은 예술가들 역시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더 나은 창작환경을 만드는 일 역시 중요하다. 공공예술창작센터는 시각·다원예술에 특화된 레지던스형 창작센터로 창작과 거주,발표와 전시가 원-스탑으로 가능한 창작센터를 말한다.

국내, 외 재능있는 예술가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에 거주하면서 창작과 연구, 지역 네트워크를 유도하며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 국내,외 예술창작 트렌드 등을 지역에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한다면 지역과 연계된 예술창작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인천 아트플랫폼 등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지역문화예술회관의 창·제작극장화를 들 수 있다.

지역의 공연장들은 그 규모나 가치에 비해서 유의미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엄청난 건축비와 가동비용, 운영인력등을 고려할 때 공연장은 단순대관과 초청공연등을 위한 관리 운영 정도의 수준에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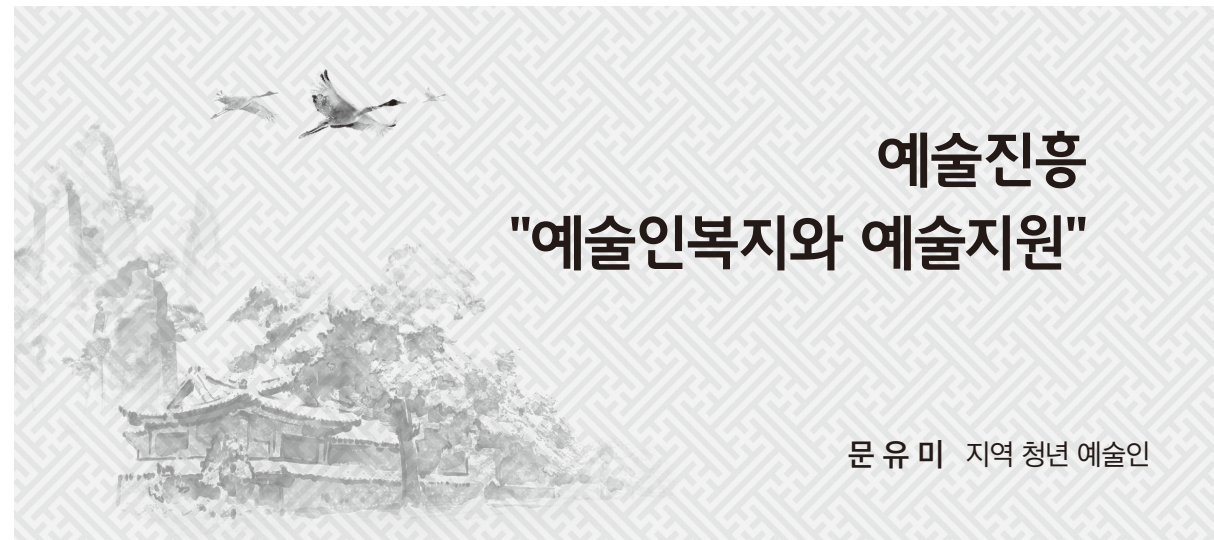
지역 공연예술계의 발전과 성장, 생태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공연장은 예술현장과와의 협업을 통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지역문화예술회관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위탁되어있거나 특정부서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다. 공연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문화예술회관들은 독립된 운영구조를 갖어야 하며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시의성있는 공연을 창작하거나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연을 제작 하는 등 창·제작극장으로의 위상을 수립하는 게 맞다.

지역문화예술회관들이 공공공연장으로서의 책임은 소홀히 하고 상업 뮤지컬이나 상업극을 초청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성장에 기여하고 예술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관객개발을 통한 공연예술생태계 복원등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책임을 해야한다.

다섯 번째로는 민간창작공간지원을 들 수 있다.

예술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창작자들의 창작공간이다.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은 그것 자체로서 예술공간이자 예술거점이다. 즉 예술생태계의 최소단위인 것이다. 그만큼 현장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예술생태계의 복원과 지속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공공영역의 창작공간 만큼이나 중요한 민간창작공간들은 지역민들이 일상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이자 생활속에서 예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소이기도 하다. 예술가 이웃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예술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예술교육, 예술의 일상성, 생활예술,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우리 주변에 이웃한 예술가들이자 그들의 창작공간이다. 이런 민간예술창작공간(스튜디오)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임대료지원, 이웃과 함께 하는 소규모 예술 커뮤니티 지원, 오픈스튜디오 지원 등 예술창작활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몇가지의 제안들은 지원기관과 수혜예술인이라는 측면이 아닌 협력을 통한 가치와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예술의 생태계를 만들기위한 공공기관과 예술현장사이의 콜라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술인의 창작권과 경제권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예술 활동 외 다른 직업을 병행해야하는 실정이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은 소득문제로 예술 활동에 전념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컬렉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화랑과 전속계약 등을 한 예술인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술 활동과 소득활동을 병행해야하는 실정이다. 겸업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전시, 공연, 발표 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혼, 출산 등등을 경험한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창작 활동에 전념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소득활동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닌 본인의 분야의 예술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 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많은 예술인들이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수요에 비해 사업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권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지역예술가들의 접근이 더 용이해 졌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참여기업·기관이 인지부족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예술인들의 기대를 급부상하게 된 만큼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지원규모확대와 더불어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인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권역재단에서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과 참여기업·기관의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예술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인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사회(기업·기관)와 연결해줌으로서 예술 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사업장에 예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당근마켓¹⁾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예술인의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역과 예술을 잇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전국을 예술로 잇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지역의 예술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면 창작활동과 경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자들은 에이전시가 없는 실정으로 창작은 물론 기획, 대관, 홍보 등 모두 작가 개인이 진행해야한다. 미술 장르의 경우 예술가들은 홍보를 위해 전문 사이트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 그 만큼 예술인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많은 곳에서 예술인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중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술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대중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연 장르의 경우 예매까지 가능하다면 예술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던 대중들의 지지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양상 속에서 온라인 예술 소통 플랫폼은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언택트 시대에 예술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케이션 장이 될 것이다.

예술은 예술인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공유함으로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연예술을 제외한 경우 퇴근 후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문 일이다. 근로자의 경우 예술을 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기강의 인 꽃꽂이 수업 등 강사가 기업으로 출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근무 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제공함으로서 예술인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근로자에게는 복지를 제공함으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3가지의 방안은 예술인이 지원 제도에만 국한하여 자생할 능력을 잃는 것에 대한 염두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술인이 정당한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예술 활동을 하며 생계유지를 하고 또다시 창작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었으면 한다.

1) 당근마켓 : 동네에서 중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역기반 중고거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수수료 없는'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목표이다.

예술인 주거정책

사회안전망에서 예술인들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혹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에게만 한정되어있다. 이 외에도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의 소외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와 더불어 부동산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은 갈 곳 잃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정규직인 예술가들은 대출을 받을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작업실 혹은 주거공간을 매매하는 목적의 대출이라면 더더욱 대출은 거절당하기 쉽다. 예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다양한 곳에서 예술인 주거정책으로 예술인 임대주택 등이 시행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안정적인 주거형태는 아니었다. 임대주택의 연장문제와 협소한 면적으로 예술인 임대주택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듯,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작업환경과 보금자리를 원하고 있다.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건물 혹은 아파트 건설하는 일이 아닌, 아파트 분양 시 예술인 특별공급과 예술인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 특별공급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예술인 부부 혹은 아이가 있는 예술인 가정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로 생각해 본다면 수도권에만 편중 되어있던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지역의 시민들이 체험하고 향유함으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현재 강원도 춘천은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춘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은 레지던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는 데서 예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작가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만으로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춘천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문화도시에 예술이 꽃 피울 수 있는 예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창작공간에서 거주하는 예술인의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보통 가정집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위, 겨울엔 추위에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전세대출은 예술인에게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전세제도가 임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부동산은 치솟고 거주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예술인은 사회 속에서 소외된 채 본인의 예술을 닦을 수밖에 상황이 된다.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예술의 가치를 쉽게 단정하고 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예술인들에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의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문화재단의 역할 및 발전방향

예술지원정책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존재함에 따라 각각의 고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르별 실태조사에 있어 기존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개선의견을 묻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현장 당사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다양한 예술 장르에 따른 예술의 특수성과 연령별 생활양식 등등에 따라 많은 예술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예술인 복지와 지원정책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재단과 예술인, 예술단체와 ‘소통’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의 모색과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예술의 실태와 대안을 묻는 포럼이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변화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재단 측의 질의했을 때 답변은 인력부족과 결재단계에서 불발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재단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향후 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예술인들을 만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1. 결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팀장이상 급의 간부와 팀원들의 적절한 업무분배와 인력배치로 경영 효율성 증진.
2.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배분하는 조직에서 나아가 예술인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문화예술 정책에 관여. 지자체 문화예술 담당자의 이해와 설득 적극 필요.
3. 예술인의 사회적 소외를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결과물ok 영수증이 필요 없는 창작 지원금 확대.
예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
예2) 강원문화재단 <청년예술인지원사업> : 자기 계발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금을 매월 최대 25만원까지 책정가능.
5. 지원금 공고 및 선정과정에서 1차, 2차 심의 대상자 발표와 정확한 일자 및 시간 공고.
6. 지원사업 예산 사용 시 재료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모품만 사용가능
➡ 지원 선정 금액의 일정 퍼센트 장비 사용 가능 개선 필요.
7. 단체 지원사업의 대표는 작품제작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 선정금액의 5%로 축소
➡ 기존의 10% 복구.
8. 단체설립 기준 3년 이상 된 단체만 지원가능 -> 개선 필요.
9.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반디돌봄센터’(단 서울 2곳) -> 지역 확대.
10. 경력단절 예술인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강원예총 정책제안

 강원 한국예총강원도연합회

강원예총 문화예술의 공급자(예술인)와 소비자(도민)의 선순환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

1. 지역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사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 비전공자 및 예술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행정 전문인력과 단기간 계약직 인력 고용의 반복으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의 예술 역량 부족 심화
→ 2022년 3월 기준 강원도(지역문화재단) 15곳 근무 총 316명
- 도내 지역 문화재단 내 각 공연장, 전시실 등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예술인 들이 받는 혜택이 부족

◎ 정책의 목표

- 지역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인 연계에 따른 문화재단,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시설 우선 배정 등을 통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주요 내용(이행 방법)

- 지역문화재단 내 강사, 코디네이터 등 단기간 계약직 및 행정 전문인력 등에 지역예술인 고용 의무
 -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회원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독서지도사로 배치
 - ▷ 지역박물관 미술관에 문화해설자 및 도슨트 확대 배치

- 지역문화재단 내 공연장, 전시관 등 대관 시설에 지역예술인 대관 배정 의무화
 - ▷ 재단에서 먼저 대관 배정을 하고 빈 일정(날짜)에 지역예술인 대관 배정

◎ 이행 기간

- 2022년부터 지역문화재단 내 지역예술인 고용 의무화 (5년 내 정원의 20% 목표)
- 2022년부터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역 공공 전시관 및 공연장 등 대관 의무 배정 (60일 이상)

◎ 기대 효과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 고용을 통해 예술 역량 강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예술인 생계 지원
- 지역 거점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2. 공공기관 디지털갤러리 구축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예술인 및 청년 예술인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게 소개할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특히 NFT 등 디지털 예술 창작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이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전무한 실정

◎ 정책의 목표

- 도내 18개 시·군, 공기업 등의 디지털 갤러리를 통한 지역예술인 및 청년예술인의 작품 상시 소개
- 국내외 주요 작품들의 디지털 전시를 통한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 주요 내용(이행 방법)

- 도내 18개 시·군, 공기업 등의 민원실 공간을 디지털갤러리 조성(현재 방송사들의 실시간 뉴스 서비스 등만 운영 중)
 - ▷ 디지털갤러리 콘텐츠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이원화 송출 시스템으로 운영
 - ▷ 강원예총의 도내 12개 지역예총과 8개 전문협회를 포함 도내 110개 지회·지부의 작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 및 유지관리
 - 1) 한·중 예술교류전, 동북아 4개국 지방정부 교류전, 한·일 교류전 등 작품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전시
 - 2) 춘천예총 1층 갤러리, 춘천미술관 상설 디지털갤러리 시범 운영 예정
- 디지털 갤러리 작품전시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인정

◎ 추정예산(재원조달방법)

- 디지털 미디어 구축 및 작품 디지털화 비용 지원
- 작품 선정 및 송출에 따른 저작권료 일부 지원

◎ 기대효과

-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이 공공장소에서 전시에 따른 지역 예술 홍보 효과 확대
- 디지털 갤러리 운영에 따른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고취
- 문화생활 인프라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가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

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 회원 협회 정책 제안

협회	정책명
문인협회	문협 회원 창작 진흥 사업 · 강원도 문인협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자의 창작물을 강원도 18개 시·군 관계 기관에서 구입 후 도내 도서관 배포
무용협회	무용지원센터 건립 · 연중 상설 공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무용지원센터 건립 (지역춤 및 지역브랜드 개발)과 무용단 단체 공연 활성화 · 강원도 출신 대학 석사, 박사, 등 전문 고학력 무용가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부족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다수 수도권 으로 젊은 무용가들이 이주
미술협회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 전국 유일 도립미술관이 없는 강원도 ·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강원도 향토작가 작품의 보존 및 미술사 관리와 강원문화예술의 학술적 관리 1) 국립근대미술관 개념으로 운영 2) 국립미술관 수장고(전액 국비)포함 운영(국비지원 폭을 70~80%으로 유도할 수 있음)
사진작가협회	강원도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폐지 · 창작의 결과물은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보고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이 크다 · 일반 산업 분야의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혜택의 결과물은 사업 주체인 기업 또는 특정 기관이 소유하거나 수혜를 받지만 문화 예술은 국민이 문화향유권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연극협회	공연예술 인력지원사업 확대 및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춘천, 원주, 강릉, 소극장 건립 · 연극 공연 홍보와 아카이빙을 위한 영상화 전문인력 지원 사업필요

차기 지방정부를 위한
강원도 문화예술 정책 제언

(사) 강원민예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블루로 인한 불안·우울·무기력감은 몸과 마음을 더 움츠리게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의 위로가 절실한 시기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새 정부가 출발하는 만큼,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면한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 안정된 일상을 회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기원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그래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모두 클 것이다.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중흥시키는지를 논의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화창조력 제고’다. 이는 예술가나 창작자들을 위한 것이다. 둘째는 ‘문화향유권 증진’이다. 국민의 문화복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넓히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문화경제 창출’이다. 즉 문화의 산업화, 문화경제의 활성화다. 이렇게 3가지는 어느 나라나 문화중흥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 이상적인 목표를 과연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하는가가 관건이다. 지금은 문화산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다음이 문화복지이고 문화창조력 순이다. 앞으로도 문화정책은 ‘문화경제’가 중요하다. 한류 확산의 핵심요소로 콘텐츠, 예술, 관광을 떠올린다. 모두 문화의 영역이며 이 문화의 토대가 문화유산이다. 문화의 핵심요소인 전통문화자원은 관광산업, 콘텐츠산업 등 산업간 연계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장르 간 결합, 대중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형성하고 한류 지속 확산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정책을 이제는 국민의 행복을 넘어 국가경제 창출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해야 한다. 문화가 더는 경제의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제는 연관산업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동력이다. 이를 위해 차기 중앙정부는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 기본권 보장,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K-컬처를 세계문화의 미래로 발전, 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 도약,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 제고, 제약 없고 공정한 장 애예술인 활동기회 및 가치 제고까지 7개의 문화예술 부문 공약을 제시했다.

강원민예총은 윤 당선인의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적극 환영하고, 향후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새 정부와 차기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내 문화예술 융복합 인프라 구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문화예술은 ‘연결’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흥의 책무를 가진 사람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나아가 남한과 북한을 예술로 연결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문화예술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융합도 필요하다. 도내 폐산업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창작 공간이나 융복합 미디어아트를 조성하는 등 이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작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융합을 위한 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나아가 한국문화를 세계로 확산하는 신한류와 융합하여 전 세계 한류 팬에게 선보여 방한 관광의 해외홍보마케팅에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역에 맞는 콘텐츠산업 개발과 전통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케이팝 스타가 주도하는 문화현상은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다른 영역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블랙핑크의 한복 의상과 BTS의 노래 ‘대취타’에 전 세계 인들은 열광했고, 자연스럽게 한복과 국악,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구촌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이 선망 국가가 되며, 나아가 다른 분야의 한국적인 것, 한국산 제품, 한국생활문화까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전통문화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류의 뿌리인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다.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의 전통예술이 있고, 한복, 한지, 한식, 전통놀이 등 전통생활양식도 포함된다. 전통문화예술은 한류의 원형으로 문화의 기본이고 토대이며 한국문화의 뿌리와도 같다. 한류스타를 통해 조명된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 그것의 기초가 되는 전통문화예술 지원이 중요하다.

셋째, 문화자치 문화분권에 부합하면서 공공성 확보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마련을 당부한다.

문화예술 외에 다른 분야도 유사하겠지만 민간주도에만 의존하면 한쪽방향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반대로 지나친 공공정책이 개입 할 경우 문화예술의 공공의존성이 높아지고 자립성이 부족해지는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문화분권 문화자치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큰 프레임에서의 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논리도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기본법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예술창조 권리를 자유로운 문화 창조의 권리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원도민 기본 권리로서의 예술(창조)권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문화예술 지원의 기본적 논리구조를 강원도 문화행정 주도의 성장 논리가 아닌 강원도민의 문화 창조권 측면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강원도 문화예술이 행정위주 예술에서 개별적 강원도민들의 문화와 예술로, 행정이 주도하는 총체적 문예진흥의 원리가 아닌 강원도의 예술인과 도민의 다원성에 부합하는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조해주는 보충성에 입각한 예술행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강원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와 실질적인 예술인 권익보장을 요구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모든 국가정책이나 법률 제정 등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보장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내 지역 예술인들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플랫폼을 구축 보완하고 복지 지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심리 치유 프로그램 비용 지원, 인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대상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소외 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포럼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맞춤형 예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문화예술 향유권을 살려내는 길이 향유자와 창작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며, 강원도 지역예술인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계는 새 정부와 차기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부흥 및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A single vertical line runs down the left side, creating a margin. The paper is otherwise empty of any text or markings.